

반환점 돈 국정감사

# '조국' 둘러싼 여야 공방은 현재 진행형

김도읍 “불법 점철된 조국, 국민 분노에 사퇴”

이철희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 사퇴해도 문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지만,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대미문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들 많은 국민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자 조국을 사퇴시켰다”며 “이제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검사과전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 의견을 조화

반게 돼 있다. 그런데 지침을 무시해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 취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제원·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김 차관을 상대로 자료 제출 등을 압박하자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억발지리지 말라”고 항의했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 사퇴해도 문제”라고 야당의 공세를 비교기도 했다.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미군이 주도하는 해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압부모고에서 올해 전술제대급 KMEP(한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올해 24회 실시됐고, 내년 22회 계획 중이라며, 2017년 17회 2018년 11회에 비해 실시 횟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또 매년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골드’를 비롯, 해외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며, 2021년부터는 호주·필리핀에서 열리는 훈련에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미 군사 동맹 강화 방안으로는 한미 협업체 정례화, 친철활동 활성화 등 한미 해병대 교류·협력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가스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지적을 받았다.

이중배 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 간 발생한 39건의 사고로 29명이 부상하고 5명이 사망했다”며 “특히 매년 2017년 4건, 2018년 7건, 올해 10월까지 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성희롱·성추행 등 내부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희롱, 성추행,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했다. 내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남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전남대병원이 간호사 1600여 명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전남대병원은 간호사 1650 명에게 가산 수당 등 33억 원을 지급하라는 등 미지급계 시정지시를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았다”며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도 전남대병원은 금액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석 전남대병원장은 “불일치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확인작업을 하는 중이며 그래서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조국정국 정리한 文대통령...경제 챙긴다

‘조국 정국’을 정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는 경제활력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럼에도 검찰개혁에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조 전 장관의 거취 및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두고 국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던 것을 언급하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

는 지지율’이 결국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사의표명을 수용하고, 경제활력으로 국민전환을 하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10월2주차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긍정률은 41.4%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이상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30%대 지지율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복수의 여론관계자들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사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떨어진 점이 국

내달 임기 반환점...민심수습 통해 지지율 견인 노력

靑 “다시 나아가야 할 때...민생경제 행보에 좀 더 전력”

했다”고 말했다.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은 경제에 두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또한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다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앞으로 민생경제 행보에 좀 더 전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매우 아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나왔으나 명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그를 교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그간 조 전 장관의 검찰 개혁 추진에 꾸준히 힘을 실어주며, 경제행보도 병행하는 발걸음을 해왔다.

하지만 내달 9일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속절없이 떨어지

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돌린 문 대통령 지지율 또한 최근 계속해서 하락곡선을 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근래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여당(더불어민주당), 사회원로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보고 받으며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진행했던 전경경제투어 일정(충남) 등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있을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민생과 경제 부문에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꼼꼼히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원 “윤석열, 퇴진할 이유 없다...조국 총선출마, 檢에 달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따른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윤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러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지금 검찰 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지도나 민주당의 지지도가 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 장관으로서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전혀 국회 정상화에, 또는 국회 토론을 원하지 않고 오직 조 장관의 사퇴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검찰개혁을 위해 물러나주는 것이 좋겠다. 리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깔끔히 씻고 사퇴를 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후임 법무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과거 민정수석 경험도 있고,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개혁적인 조국 후에 검찰개혁을 인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은 전 의원이

아닌가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도 과거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명됐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검토되지 않을까”라고 덧붙혔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상태가 잘 극복된다면 하면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 하고 나서리라 예상된다”고 했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